

전주매일

비수술적 착추관절 통중치료 전문

시 1 인 신경외과 의 원 환경 관 경 문 합 (063)220 - 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월 6번지

2017년 **9**월 **29**일 **금**요일 (음 8월 10일) 제1902호

www.jjmaeil.com

대표전화(063)288-9700

▶ 우리농산물로 만든 달콤한 송편드세요



추석 명절을 앞둔 28일 농천진흥청 내 오공제 정자에서 전주시 도담 어린이집 원생들이 한복을 입고 우리 농산물인 수수, 조 등 잡곡을 이용해 만든 송편을 들어보이고 있다.

전주탄소국가산단 예타 통과 확정적

KDI 예타결과 정책타당성 · 지역균형발전 종합 AHP 0.582로 기준치 0.5 초과 LH, 11월부터 산단 지정 신청 내년 상반기 승인받아 하반기부터 용지보상 추진

전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 자 송하진 도지사 공약시업인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'이 한국개발연구원(KDI)의 예타 통과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밝혔다.

지난 8월 KDI 최종보고회에서 B/C가 1.55로 높게 나와 예타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데 이어 28일에 KDI가 정책적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종합 한 AHP를 잠정적으로 완료하고 그 결 과(0.582)를 국토교통부에 알린 것이다 통상적으로 BC 1이상 AHP 0.5이상일 경우 시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.

전북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, 전북 도, 전주시,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업 하여 사업규모 조정, 유치업종 확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난 1월에 기재부에 재예타 신청서 접수 및 재예 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에 기재 부가 예타 재추진 타당성을 인정해 국 책연구기관인 KDI에서 4월부터 본격 적으로 추진하게 된 결과라고 밝혔다. 예타가 통과되면 산업단지 사업시행 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

오는 11월부터 LH는 국토교통부에

산업단지 지정 신청, 2018년 상반 기 중에 승인을 받아 하반기부터 용지보상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 이다.

한편,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2,300억원(국비505억원, 지방비 115억원, 한국토지주택공사 1,680억원)을 투입해 탄소산업집적화단지 63만8,485㎡를 조성하는사업으로 2,4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1,82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되는 사업이다. /김진성기자

둥근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

-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

전주 남부권역 주민들 건강한 여가생활 기대

시,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월부터 착공 완공은 내년 말 예상

전주시 평화동 등 남부권역 주 민들의 건강한 여기활동을 위한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본격 화된다.

시는 평화동 전주 국민체육센 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등의 절 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오는 10 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.

전주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진흥기금 30억과 지방비 80억원 등총 사업비 110억이 투입돼 완산구 평화동 2가 322-1번지 일원 1만1,799㎡부지에 지하1층과 지상 2층, 연면적 2,895㎡로 건립되며,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장 등

실내체육시설과 농구장, 족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구분해 들어 설 예정이다.

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,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체육시 설이 부족한 전주 남부생활권 주 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, 시민들 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특히, 남부권역에도 대규모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돼 모든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건전한 운동 을 즐기는 생활스포츠도시에도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.

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"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한층 더 높은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고 말했다. /김민근 기자

"MB정부, 정진석·박형준 등 총선 지원"

민주당 적폐청산위, 문건 폭로

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, 박형준 청 와대 시민사회 특보 등 19대 총선 출마자를 청와대가 직·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.

적폐청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 긴 문건을 폭로했다.

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팀에서 2011 년 12월 작성한 '대통령실 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'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19대 총선에 출마 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2명, 비서 관 7명, 행정관 2명 등 11명에 대한 청와대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고 전 했다. 해당 문건에는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전 의원, 행정관을 지 낸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.

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"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당선율 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이래 동향 파악 및 지역 민원을 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 구를 설치해 총선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" 며 "참 기막힌 내용"이라고 비판했다

박 위원장은 "결국 이명박 정부는 보수단체를 이용한 관건선거를 획책 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가 중심이 돼 전방위적 선거지원으로 자신의 퇴임 후 보호 방안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증명됐다"며 "이에 대한 철저 한 규명, 수사 법적 책임이 뒤따라 야 한다"고 지적했다.

문건을 입수한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김효재 전 이명박대통령 정무수석의 김성준 보좌관이유출한 것으로 2014년 9월과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대통령비서실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인계됐다. /뉴시스

**추석연휴 관계로 10월 9일자까지 신문 쉽니다.

